

3

진보정당과 선거

정영태

선거와 진보세력

선거 참여 여부와 참여시 방식에 대한 문제는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정치세력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진보정치세력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에서의 승리가 진보정치세력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한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해 선거에서의 승리와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더욱 희박했기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이 선거에 적극 참여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정책을 실현하자는 주장은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사실, 80년대 이후에 국한시킬 때 진보정치세력이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1 선거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의원 등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취할 경우 선거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의 권력을 점유하는 방법에는 선거 이외에도 혁명이나 쿠데타와 세습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혁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쿠데타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제3세계 사회에서 주로 군부가 활용한다. 그리고 세습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국왕이나 황제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된다.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권영길 위원장을 제15대 대선의 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의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국민승리21’을 건설하면서부터 진보정치세력의 선거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²

199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정치세력 내에는 선거에 적극 참여해 국가기구로 진출하려는 분파(‘선거사회주의’)와, 선거정치를 집권세력의 계급적 한계나 실정을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정책적 입장을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기회로만 활용하려는 분파(‘혁명적 사회주의’)가 혼재해 있었다.³

이 두 가지 조류 중에서 적어도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진보정치운동은 선거가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만 국가권력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진보정치운동의 지배적인 경향을 이뤘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믿었던 세력들도 선거에 참여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선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계급성과 문제점을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명분과 정책을 선전하는 데 선거운동의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이 시기 선거정치에 적극 참여한 진보인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다른 분파들의 지지와 지원을 얻지 못한 ‘선거사회주의자’들은 후보 선출이나 선거운동에 있어서 졸속과 고전을 면치 못했고, 따라서 선거에서 얻은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

2 물론, 1980년대 이전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면 1960년 4·19 정치혁명 이후 열린 정치 공간에서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선거에도 적극 참여한 사례가 있으며, 그 이전에도 이승만의 자유당과 윤보선의 민주당을 위협했던 조봉암의 진보당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석 대상을 1980년대 이후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면이 제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와 이후 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로 말미암아 1960년대 진보정당운동이 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이다. 1950년대 진보당과 1960년의 각종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정영태 「진보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 - 1956년의 진보당에서 1990년의 민중당까지」, 김금수·정영태·오삼교·이민영 (공저),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참조.

3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둘러싸고 국내외 진보정치세력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독일 ‘좌파 공산주의’ 등의 극좌적인 입장에서 선거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힘을 선거정치로 유도하고 선거 결과가 국민 의지의 참된 반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내며 대중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부르주아를 위한 조기경보 체계로, 그리고 부르주아 내 분파간 갈등 조정 기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와는 달리 사회민주주의나 유로코뮤니즘 등 의회주의적 입장에서는 선거 제도를 포함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제도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이익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적극 활용하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맑스나 레닌 등 정통 좌파의 입장에서 본 선거는 체제를 안정시키는 기능과 ‘계급투쟁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양날의 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에 따라 적극 활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이 세가지 경향이 공존했다. 좀더 자세한 논의는 손호철,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사, 1993.

다. 미미한 선거 결과는 선거 참여의 의미를 더욱 축소시켰고,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 선거는 다시 미미한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 시기 진보정치운동에 있어서 '선거사회주의'가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부르주아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계급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다가 한국 민주주의는 더욱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혁명으로 건설하고 초강국 미국의 온갖 압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을 지탱, 변창해온 현존사회주의가 진보세력의 강력한 대안으로 살아 있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1989년 통독과 이후 현존 사회주의권의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로의 '개혁' 그리고 서구 시민주의세력의 쇠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보수집권세력으로 합류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가 1992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패로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던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이 거의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이로 해서 선거사회주의가 진보정치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와 학생 등 잠재적인 지지세력들에게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도하거나 지지했던 세력과 노동자들이 투쟁의 초점을 진보정당 건설과 이를 통한 선거 참여가 아니라, 민주노총건설과 이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으로 돌렸기 때문이다.⁴

이처럼, 진보정치운동의 주요 기반인 노동운동이 정당 건설과 선거투쟁이 아니라 조직 건설과 경제투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은 노동자와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차단하려는 집권세력의 전략 때문이기도 하고, 김영삼 정권의 '개혁적인' 성향 및 진보세력과의 인맥 때문이기도 하다.⁵ 여기에 덧붙여, 선거사회주의자(한국노동자당)들이 이 시기에 장기표 등의 민중당과 추진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통합민중당) 시도가 92년 4월에 실시된 제14대 총선에서 실패로 끝나고 만 것도, 선거 참여를 통한 국가기구로의 진출과 진보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노

4 학생운동의 경우 통일운동과 학생복지 향상으로 활동의 초점을 옮겼다.

5 김영삼 정권은 그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친노동자적인' 정책과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고, 진보정치세력과 인맥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힘들게 독자 정당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김영삼 정권을 지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동자와 학생들의 지지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됐다.

진보정치세력이 독자 정당을 건설하고 선거를 통해 국가기구로 진출해 진보적 정책을 실현하지는 입장이 해계모니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6년 12월 말 집권 여당이 개악된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을 계기로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면서부터였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노동 합법화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을 개정 노동법을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자 민주노총 소속은 물론,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추운 겨울 한 달 이상을 총파업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보수야당이 여당과 합의한 개정 노동법은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보다 별로 나을 것 없는 것이었다. 진보정당의 국가기구로의 진출에 대한 필요성이 광범위한 대중들에게서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즉,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선거 참여를 추구해온 진보세력 분파가 민주노총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얻어 97년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세우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독자 정당(국민승리21: 이하 '국승21')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96~97년 총파업과 보수 여야가 합의한 개정 노동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악 노동법의 날치기 통과와 총파업 그리고 이후 여야간 합의한 개정 노동법으로 인해서 선거를 통한 국가권력 장악과 진보적인 정책 실현을 추구하는 '선거사회주의자' 분파가 적어도 도덕적 해계모니는 장악하게 됐지만, 정치적 해계모니를 잡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약진'을 기록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까지 또 다시 몇 년이 흘러야 했다. 97년 대선에서 전국 유효득표수의 1.2%(30만여 표),⁶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전국 유효득표수의 1.2%(22만여 표)를 얻는데 그쳤던 진보정당('국승21'과 민주노동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4.7%(78만여 표), 기초단체장 1.2%(19만여 표), 광역의원 2.5%(39만여 표), 정당비례대표 시도의원 8.1%(134만여 표)를 얻어, 기초단체장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비례대표제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을 이어 '제3당'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동안 외면하던 보수

⁶ 민주노동당은 97년 대선을 위해 급속히 창당한 국민승리21을 인적 이념적으로, 계승한 정당으로 2000년 1월에 창당했다. 국민승리21은 1992년 1월 민중당과 합당한 한국노동당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국민승리21과 민주노총은 무소속 후보를 내세웠다.

언론계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주노동당의 동정을 다루어주고,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민노당 후보를 포함시킬 정도로 진보정당은 정치적 시민권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다음 절에서는 97년 대선 이후 진보정당이 채택한 선거 전략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에게 주어진 과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진보정당의 선거 전략과 성과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선거 참여를 통한 국가기구 장악과 진보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선거사회주의적 진보정치운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96~97년 겨울 총파업을 거치고 난 뒤였다. 민주당 실패와 총파업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선거사회주의의 진보정치 활동가들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 작업에 치중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의 주요 기반이 될 민주노동운동 주체들은 이 기간 동안 '제2의 노총' 즉 민주노총 건설에 치중하면서 임박한 선거를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정당 건설)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규정, 주로 무소속 후보전술, 부차적으로 친노동자 정당 공천후보전술로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민주노총은 95년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 5명과 민주당 공천 후보 2명을 내세웠고, 평균 득표수 12,920표, 평균 득표율 36.1%, 당선자 3명(당선율 42.9%)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시기 민주노총의 선거 전략·전술은 이전의 전노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후보를 내세우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주로 전국연합과의 선거연합(공동대책기구)의 틀 내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후보 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은 전노협 중앙이 아니라 해당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졌고, 중앙 차원에서의 노동자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96년 총선 무렵에는 이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는 했으나, 기본 방침은 95년 지방선거 때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민주노총은 96년 1월의 정기중앙 위원회와 2월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 방침과 4·11총선 대응방안을 확정, 정치 위원회가 주관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선거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의하면,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전제 아래, 4·11 총선

에 무소속의 독자 후보를 낸다는 것이었다. 후보 선정 기준 및 절차로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가맹 및 산하조직의 공식 의결기구에서 추천된 사람을 민주노총 후보로 하고, 노동법 개정·노동운동에 헌신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개혁 과제 등 민주노총의 정책공약의 실현을 서약하는 사람 등을 지지·지원 후보로 하되, 선정 절차는 가맹 및 산하조직의 공식적인 의결기구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96년 3월 해당 조직에서 결정해 추천한 3인(부산 연제의 박순보, 경북 김천의 이병무, 서울 성동을 김명희)의 무소속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하고, 지지·지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의 무소속 후보 3명의 평균 득표수는 1만1천여 표였으며, 평균 득표율은 12.1%였다. 당선자는 하나도 없었고, 부산의 박순보 후보가 약 2만6천 표, 2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성과를 제외 하면 나머지 2명의 후보는 불과 1천에서 3천표 미만, 1% 내지 4%의 득표율을 보여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박순보 후보의 선전이 부각됐는데, 그것은 박 후보가 평상시 시민운동단체와 사회단체와의 연대·교류 활동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해 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합공천을 받았던 데다가,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 민주시민단체와 신한국당의 일 대 일 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총선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건설은 쉽지 않았다. 진보정당 창당과 본격적인 선거 참여는 민주노총이 96~97년 총파업을 거치면서, 그간의 애매한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9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98년 지방자치단체 대거 진출, 98~99년 정당 건설, 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이라는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런 방침은 3월 27일에 개최된 2기 대의원대회에서 재확인됐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때마침 ‘국민후보운동’을 제안한 전국연합과 진보정치연합 등 민중민주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정치조직들과 결합하고, 96~97년 총파업 당시 민주노총위원장이었던 권영길을 ‘국민후보’로 내세우기에 이른다. 즉, 민주노총은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과 함께 ‘국민후보운동 추진기구’(뒤에 ‘국민승리21’로 개칭)를 구성한 뒤, 7월 24일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인 권영길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는 조합

원과 거리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와 정치교육 그리고 가두선전 등을 전개하였고, 노조간부는 물론 일반 조합원을 포함하는 정치실천단을 구성해 적극 활용하였으며,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97년 대선을 맞이해 이전과 달리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당면 과제로서의 후보전술과 선거운동을 좀더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92년 민중당이 해체된 이후 최초로 선거사회주의적 진보정당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진보정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는 총 30만여 표(유효득표율 1.2%)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노동조합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조직적 결의에 의해 정당 건설과 선거에 참여했다는 점과 진보정당의 선거 참여가 단순히 전술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민중당 해체 이후 최초로 시도된 진보정당의 창당과 선거 참여는 방식과 과정 그리고 당명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런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 2년여 시간이 걸렸다. 특히, 장기표 등의 민중당과 합당해 92년 총선에 참여했던 ‘한국노동당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 ‘국승21’이 창당되고 후보를 넘으로써, 대선이 끝난 다음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혁명적 사회주의자’ 등 다른 정파들의 불만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국승21’과 권영길 후보를 만들어냈던 민주노총은 1998년 5월 2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국승21’을 확대·재편해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승리21을 적극 지원 연대한다는 정치 방침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런 결의에서 강조한 것은 기존의 진보정당(‘국승21’)을 확대·재편한다는 조건에서 진보정당(재)창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승21’을 확대·재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새로 결성될 진보정당의 강령·정책·당명 등 진보정당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이견, 좀더 결정적으로는 80년대 이후 각자의 노선에 따라 각양각색의 진보정당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적인 대립으로 말미암아 단일한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진보정당이 9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내고, 그것도 중앙당이나 민주노총의 중앙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원하지 못한 채 지역 또는 단위 노조 차원에서 후보 선출과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인 1998년 5월 노동조합의 선거운

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가 허용되어 진보정당 창당과 선거운동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 이런 제도상의 변화가 '국승21' 관계자와 민주노총으로 해금 무소속으로나마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게 만들었다. 민주노총·국민승리21 공동후보단은 모두 49명의 무소속 후보를 내세워 23명(45%)을 당선시켰다. 당선자 가운데는 울산의 북구청장과 동구청장 그리고 경남 남해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울산 민주노총이 지지한 송철호 후보가 광역단체장을 놓고 현대그룹 등 기업 측이 지지한 한나라당의 심완구 후보와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9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노총의 98년 5월 대의원대회 결의에 힘입어 '국승21'을 확대·재편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고, '국승21'은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태어난 진보정당은 2000년 제16대 총선을 맞아 민주노총에서 결정된 후보 11명(서울과 울산 각 2명, 인천, 경기, 대전, 충남, 부산, 창원 각 1명)와 민주노동당에서 공천한 후보 10명, 모두 21명의 후보를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노조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법조항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으며, 총 득표율도 민중당이 92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1.5%)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권영길 후보가 97년 대선에서 얻은 1.2%를 얻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출마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10% 내외의 평균 득표율(서울 7명, 5.82%; 인천·경기 6명, 10.23%)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러나 52명의 후보를 내세워 총득표율이 1.5%, 평균득표율 5.59%에 그친 민중당에 비하면, 민주노동당은 민중당의 절반에 못 미치는 21명의 후보로 총 득표율 1.2%, 평균 득표율 12.26%를 기록함으로써, 진보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기쁘게 했다. 또한, 1만 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의 비율(21명 중 6명, 즉 28.57%)도 민중당(52명 중 7명, 즉 13.46%)보다 높았으며, 울산의 최용규 후보와 창원의 권영길 후보는 막판까지 1, 2위를 다투는 경합을 벌임으로써 진보정당이 선거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진보정당이 제16대 총선에서 얻은 성과는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좀더 중요한 성과는 민주노동당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당이 취해야 할 전형을 만들어냈고, 그런 점이 대중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다. 민주노동당은 일찍부터 당내 민주화에 철저함으로써 선거가 끝난 뒤 지역감정 조장 자제, 정책 대결, 깨끗한 선거운동을 충실히 실천하는 정당, 가장 민주적인 정당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시간이 촉박해 ‘국승21’이 진보진영 내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당내는 물론 다른 진보정치세력과 1년여 기간 동안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당내외 위상이 훨씬 공고해질 수 있었고, 총선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선거에서 얻은 성과와 대중적으로 확보한 평가에 힘입어, 민주노동당은 정당의 존립 요건에 못 미치는 3% 이하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는 달리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고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협력해 정리하고 자제, 영세사업자를 위한 임대료 합리화 등 기층대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당원을 확대하는 등 지지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이런 주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조건도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례대표의석 배분 방식과 기탁금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1인 1표제’에 대해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는 1인 2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제3회 지방선거를 맞이한 민주노동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7명, 기초단체장 후보 12명, 광역의원 후보 67명,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 25명, 그리고 기초의원 108명 등 총 219명의 후보를 공천하였다. 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31명, 총 44명을 당선시켰다.

당선자 수만을 놓고 보면 진보정당이 얻은 성과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설정한 목표나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을 보자면, 대단한 성공이었다. 우선,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거둬들인 성과는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즉 “① 광역단체장 당선 ② 광역단체장 득표 2% 달성 ③ 정당투표 5% 달성으로 확정하고, 이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자체 목표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성공이었다.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으나 부산과 울산에서 선전을 했고, 광역단체장의 전국 득표율도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4.7%에 도달했다. 또한 정당투표에서도 전국적으로 8.1%,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를 넘겼다. 또한,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을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에게는 대단한 성공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광역제도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노동당은 8.1%를 얻음으로써 자민련을 대체하는 ‘제3세력’, 일부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이은 '제2당'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는 진보정당이 새로 출범한 후, '국승21'로부터라면 5년, 민주노동당으로부터라면 2년만에 얻은 것인 만큼 앞으로 진보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점유할 수 있는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과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실로 크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적 대안을 극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 한정시키고 있는 우익보수 반쪽의 정치 지형이 좌우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정치권에 진출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치를 비합리적 감정 대립과 비효율 구조로 왜곡시키고 있는 지역 대결과 부패 고리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제는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진보정당이 제도정치권의 강력한 세력으로 진출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제도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익보수정당들은 이런 과제를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즉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민주당조차도 지역감정과 부패구조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도에 달하면, 이들 보수정당들은 획기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곧 잠잠해지고 만다. 국민참여경선으로 한국 정치의 일대 변혁을 초래할 듯 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성 정당의 한계를 입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성 정치권의 바깥에 있는 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기성 정치권 바깥에 있는 세력으로 외세가 있을 수 있고, 진보정당이 있을 수 있다. IMF가 한국식 경제 시스템을 영미식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 놓으려고 하는 것이나, 히딩크가 한국 축구계를 바꿔 놓은 것은 외세에 의해 우리 체제가 개혁됐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외세에 의한 변화는 민족 자존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 한국 정치의 병폐를 바로 치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우리 내부의 개혁세력, 즉 진보정당이 기성 정치권의 변화를 강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심화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정당

이 해야 할 역할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진보정당에 대한 잔존해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과 지역감정 등 외적인 조건도 결국은 진보정당이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일반 국민은 물론 진보정당의 주요기반인 노동자와 대학생들에게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최대한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과 정치력을 강화하고 대중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유권자들이 지지할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공약 또는 이념적 입장보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정수행 능력이나 정치력 또는 후보의 전반적인 인상·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97년 대선 투표에서 지지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국정수행능력·정치력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응답자는 70%를 차지했으나, 정책·공약을 보고 지지했다는 유권자는 극소수(14%)에 지나지 않았다.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국정수행 능력이나 정치력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은 진보정당의 주요 기반인 20대 대학생과 20~30대 노동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정당만의 고유한 정책·이념을 개발·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이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가 인천 지역 노동자 1,000여 명과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과 9월 사이 약 4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적인 정책 성향을 가진 노동자가 모두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노동자조차 20~30%가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런 '일탈'은 지역감정이나 연고주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보정당 후보의 정책 수립·집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 후보자 이미지가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후보로 나올 사람의 능력과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진보정당 후보만의 독자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과 이미지로 무장해 앞으로 있을 대선 후보간 정책토론, 특히 공중파매체가 주관하는 토론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을 제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권과 학생운동권의 고질적인 분열과 대립을 극복해 단일한 진보진영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통일된 대오(예를 들

어, 사회당이나 한국노총의 신당과의 통합)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국정수행능력·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후자는 좀더 용이하게 이를 수 있을 것이며, 후자를 실현한다면 전자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둘째, 다른 정당 후보와는 차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정책·이념 대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감정이나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기성 정당과는 달리, 진보정당은 정책 대결을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와 대학생을 주요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기성 정치권에 가장 환멸을 많이 느끼고 그만큼 새로운 개혁적인 정당, 후보의 출현을 열렬히 기대하는 층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기성 정당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집단이 가장 갈망하거나 어려워 하는 분야에서 진보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면, 노동자와 대학생의 정책 성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두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이지만, 모든 정책 영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경우 『한겨레』의 2001년 2월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11.8%가 완전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비교할 때 22~30%가 완전폐지를 지지한 노동자와 대학생은 일반 국민보다 '진보적' 내지 '급진적' 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이 더 '진보적' 이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노동자는 일반 국민보다 '진보적' 이라 할 수 있으나, 대학생들의 경우 일반 국민의 성향과 비슷했다. 반면, 대북지원, 사형제도, 공해산업 등 다른 정책 분야에서는 이 두 집단과 일반 국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여러가지 정책 영역 중에서 일부에서는 압도적인 다수(2/3)가 형성되어 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과반수는 넘지만 불안한 다수이며, 일부 정책 영역에서는 아예 상반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도 하다. 대학생의 경우 압도적인 다수가 형성되어 있는 정책 분야는 정리해고제(필요), 주한미군(단계적인 축소), 국가보안법(개정 또는 폐지), 대북지원(현행과 축소) 등이며, 불안한 다수가 형성되어 있는 정책 영역은 정부의 기업규제(현수준과 축소), 교육시장개방(찬성), 공해산업유치(반대) 등과 같다.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영역은 사형제도이다. 노동자의 경우 압도적인 다수는 주한미군(단계 또는 즉각 철수), 국가보안법(개정 또는 폐지), 대북지원(규모축

소), 공해산업유치(반대) 등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불안한 다수는 기업규제(현수준 또는 축소), 정리해고제(불필요) 등에서, 그리고 교육시장개방,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비슷한 비율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노동자와 대학생의 성향은 정책 영역에 따라 절대 다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반반으로 나누어져 하나로 쉽게 통일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우선 주요 지지 기반을 이루는 사회 집단(노동자와 대학생)에서 이미 압도적인 다수(예, 2/3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정책(예,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탈물질주의적 가치)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 주요 지지기반을 이루는 사회집단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정체성 내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절대 다수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형성되어 있는 정책 분야라 할지라도 다른 정책 분야와 연관이 될 수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수가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분리해서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의 주요 기반인 학생과 노동자 가운데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제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대북지원(또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절대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이 보수세력(정당/정치인/언론)에 의해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역공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개폐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

정영태 yijung@inha.ac.kr |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논저로는 『한국의 지성 100년』, 『진보정당의 현재와 미래』, 『영국 신노동조합주의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 등 다수.